사 설

農心에 끼얹은 '찬물'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 오다시피 했던 지황이 국내에서도 이제 막 수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금년 봄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가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지황종근 「북경1호」를 들여와 계약재배를 처음 시도한 것이다. 재배면적 12만평에서 총 1천3백톤의 지황생산이 예상된다. 재래종에 비해 월등히 굵은 다수확품종 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은 물론이고 각계의 관심이 지황수확에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대에 부풀어 있던 農心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산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지황 5백톤을 수입키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번 수입된 1백여톤과 연말까지 들어올 예정인 북한산 지황 2백여톤을 합하면 실제로 시장에 유입될 수입지황은 8백여톤에 이르는 양이다.

그러나 황당함은 지황 수입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산이 근당 3천원인데 반해 수입지황은 ㎏당 1천원 수준으로, 수입해 들어올 경우 시장장악이 뻔한 사실임에도 국내재배지황의 판로와는 무관한 듯한 수급조절위의 태도이다.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 수급조절품목은, 사실은 알고보면 특정업체만 살찌우는 노른자위로 이용되고 있는건 아닌가. 수확기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국내생산량에 대한 조사 통계도 없이 무턱대고 많은 양의 값싼 수입지황을 들여오기로 한 수급조절위의 결정은 바로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생약 살리기도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는 뼈아픈 자각이다.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차원에서라고 하더라도 국내 생산량에 대한 적절한 수매방안이 강구되고 나서 그리고 부족한 만큼 수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이를테면 수입지황을 배정받은 원료의약품제조업소가 국산지황에 대해서도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수매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지황에 국한되는 얘기만은 아니며 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자보호라는 제기능 다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당연한 手順이다.

'제 발등 찍는 꼴'

제약회사들의 수입 엑스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약재는 사실 식품으로 보다는 약용으로 또 한의원이나 한약방 보다는 일반 제약회사에서 60% 이상이 소모된다.

그런데 최근 몇년 전부터 제약업계는 한약재를 엑스화 시킨 원료를 수입, 제약원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약사들의 엑스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엑스화된 한약재의 가격이 초재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약재를 수입할 경우 품목의 제한을 받는데다 수입후 품질검사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엑스제는 해당원료가 함유된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제약사의 자가품질관리에 맡겨져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고 수월하게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선호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제약업계에서 자사제품 홍보를 위해, 이것저것 첨가되었다고 내세우는 한방생약제제는 결국 수입엑스제인 셈이다.

지금 농촌에서는 판로를 찾지 못해 생약재배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당장 눈 앞의 이익만을 생각한 무분별한 수입 엑스제 사용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이는 결국 '제 발등 찍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한약재원형으로는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엑스제·식품원료로는 마음놓고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절름발이 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생약 중금속 기준 강화

현행 1백 PPM 이하에서 30 PPM 이하로

잔류농약 허용한도·시험방법 추가설정

◇9월19일, 경동약령시장 진입로에서 아치준공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약(한약재 포함)등에 대한 현행 중금속 허용기준을 당초 안에서 하향 조정하고 잔류농약의 허용한도를 추가설정 고시함으로써 유통한약재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될 이 고시는 생약 및 생약제제에 대한 총 중금속 허용기준을 현행 「1백PPM 이하」에서 「30PPM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생약에 잔류할 수 있는 유기염소제류 농약 5종에 대한 각각의 허용한도와 시험방법을 추가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중금속 30PPM 이하 허용 기준의 적용범위는 생약·한약제제·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약제제이며 광물 생약과 그 함유제제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고, 엑스제·유동엑스제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금속 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을 따로 정한 품목은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

▲잔류농약 허용기준 : BHC(0.2PPM), DDT(0.1PPM), Aldrin(0.01PPM), Dieldrin(0.01PPM), Endrin(0.01PPM).

경동약령시 아치준공식

경동약령시장 진흥회(회장 張書九)는 지난달 19일 약령시장 진입로에서 노승우 국회의원, 박훈 동대문구청장, 윤영진 경동약령시협회장 등 내빈들과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령시장 아치준공식을 거행했다.

이 아치준공식은 지난 6월1일 경동한약상가가 경동약령시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치를 새로 교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거행된 것이다.

경북 자연산 송이 풍작

지난해 가뭄으로 대흉작을 보였던 경북도내 자연산 송이 작황이 올해는 잦은 비로 포자형성이 좋아 송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1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부터 자연산 송이 집단채취지인 봉화, 문경 등 도내 북부산간지역 9개 임업협동조합에서 첫 실시한 송이 수매에 모두 1천7백㎏이 수납됐다.

이날 수매가격은 ㎏당 △1등급이 8만~9만원 △2등급이 5만~6만원 △3등급 3만~4만원 △등외품 2만~3만원에 이루어졌으며 10월 중순까지 수매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들 북부 산간지역 농민들은 지난 80년대부터 매년 5백t 가량의 자연산 송이를 채취, 수매해 왔는데 지난 92년 5백26t의 채취를 고비로 93년과 94년에는 포자발아 시기인 7, 8월에 비가 오지 않아 작황이 부진, 1백4t과 30t을 채취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지난 7, 8월에 이들지역에 잦은 비가 내려 송이 포자가 많이 발아해 5백30여t의 송이를 채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삼 농약잔류기준신설

10월1일 부터 시행

인삼 및 인삼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입자유화에 따른 불량 인삼 및 제품의 수입우려를 없애기 위한 인삼(제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식품위생업의 식품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 복지부는 인삼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DDT 0·1, BHC 0·2, 델탈스린 0·5, 엔드린 0·01, 프로시미돈 5·0등의 중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인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12종으로 우리나라에서 6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된 DDT등 5종과 일본 독일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파라치온 등 5종, 중국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메탈렉신등 2종이다.

본 기준안은 국내 공고를 통한 소비자, 생산자 및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의견반영이 있었으며 이 기준은 건조인삼의 경우에 적용되고 수삼의 경우 건조인삼의 허용기준치 25%가 적용된다.

▲토양잔류성 농약(PPM) : DDT(0·1), BHC(0·2), Aldein(0·01), Dieldrin(0·01), Endrin(0·01)

▲수출입 대응농약(PPM) : Parathion(0·1), Endosulfan(0·2), Quintozene(PCNB : 0·3), Diazinon(0·1), Metalaxil(0·1), Carbendazim(0·5), Capitan(2·0)

인사

「免」

▲전북 군산시 사무소장 송성섭(95년 9월 1일부, 이하같음)

▲경북 경산군 사무소장 차점봉(〃)

▲전남 순천시 사무소장 배경윤(〃)

「任」

▲전남 순천시 사무소장 선판수(95년 9월 14일부, 이하같음)

▲전남 강진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김재용(〃)

▲전남 진도군 사무소장 겸 공판장장 김선명(〃)

▲대구광역시 동구 공판장장 전학도(〃)

▲강원 강릉시 공판장장 어재복(〃)

내방

△대한한방병원협회 강명주차장 △법인사회단체 불우청소년돕기중앙회 최우섭사무국장 △황인구 부회장 △정형모 부회장 △합영완 이사 △박종연 이사 △장지홍 이사 △강원 정선군 조광호 사무소장 △충북 제천군 이한승 사무소장 △충북 단양군 신상섭 공판장장 △이종력이사 △경기 부천시 윤성익 공판장장 △경북 영천시 신영달 공판장장 △경기 구리시 이성덕 사무소장